「한국지방행정학보」 제2권 제2호(2005. 12): 101-114

북한의 경제적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n Economic Approach of North Korea

장 철 인 (재단법인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연구실장)

NK showed in variety reform through every part of commerce, agriculture, enterprise etc. NK dispensed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nd introduce a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to escape national plan economic for enterprise reform.

After 7·1 management, the people changed the more thinking-way. The capitalism thinking-way become injection to the people for the profit creation.

But NK's economic policy appeared slow contrast people's expectation. Market price and NK government price system appeared estrangement in real price

키워드 : 북한, 경제적 접근방법, 7·1조치, 중앙통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Key Words : NK, economic approach, 7·1 management, central control, socialism, capitalism

Ⅰ. 서 론

현대 사회는 고도의 경제적 발전을 통해서 국민에게 부의 분배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국가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발전의 가속화와 경쟁을 통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세계경제 속으로 편입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 등과 같은 제도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세계경제 상황이다.

동일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개방을 통하여 외국자본과 기술의 끊임없는 유입과 세계경제 속으로의 편입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다른 외국과의 경쟁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인정받고 무한한 시장잠재력을 갖춘 거대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이고, 베트남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속으로 경제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발전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국가들도 회의적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북한이 갖고 있는 폐쇄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경제적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폐쇄위주의 자국 체제유지 시스템으로 인한 외부 국가들의 불신과 경제에 관한 일관성과 제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간의 무역간 신뢰성이 잃은 상태에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북한경제는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유일적 관리와 통제 하에 있는 계획경제이며,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우에 기초한 집단주의 경제이다. 여기서 계획경제는 유일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발전하는 유기적 전일체로서의 사회주의 경제를 의미한다.

모든 생산수단이 개인의 소유로 허용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국가의 유일적 계획이 없이는 경제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이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경제는 자기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로, 부분적 결제법칙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조직되는 경제이고, 둘째, 국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지도되는 경제이며, 셋째, 사회적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이 획일적 융합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제이다.(김영림, 2002)

전인민적 소유는 사회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전체 인민의 공동의 소유를 의미한다. 전인민적 소유에서는 생산수단과 물질적 부가 개인들이나 집단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민에게만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1)]

따라서 완전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전인민적 소유가 유일한 소유형태가 되는 것이다.

Ⅱ. 북한 경제의 이해

1. 북한의 경제원칙

북한은 정권의 수립과 산업국유화에 의한 기본 생산수단의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의 확립에 의하여 1947년부터 계획경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1958년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완전히 확립됨으로써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가 되고 모든 경제활동 또한 국가의 유일적 계획 하에 움직이게 되었다.

---

1)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에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있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인금이나 노동의 질과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과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을 들 수 있고, 개인소유물은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농민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통일교육원, 2006)

그리고 북한 경제의 이해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다.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것인데 일한 만큼, 번 만큼 분배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는 허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사회적 신분의 등급에 따라 규정한 공급규정에 의하여 유일적으로 분배한다.

2. 북한의 경제구조

경제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이유는 북한의 경제가 구가의 유일적 관리와 통제 하에 있는 계획경제이며, 생산수단이 국가적 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는 국가정치권력의 직접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영림, 2002).

북한의 경제는 정치권력과 정치제도의 완전한 점유물로 정치 권력구조에 상응하게 축조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원인은 북한의 정치권력이 1인 3다원체제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3다원체제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이 아니라 당권, 행정권, 군사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당권은 노동당의 권력이거, 행정권은 주권과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군사권은 전시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위의 어떤 정치권력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당 경제, 내각경제, 군수경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당 경제

당 경제기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38호실 소속 대흥총국과 합영은행, 39호실 소속 대성총국과 대성은행, 89호실 소속 금수산의사당 5경리부, 노동당 재정 경리부로 구성된다.

노동당 비서국 38호실 대흥총국은 국내외 송이버섯 독점기관으로 주로 일본과의 교역을 기본으로 하여 당 기금을 조성하며, 39호실 소속 대성총국은 인삼과 그 가공품을 주요 지표로 하여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아세아와 유럽지역을 교역대상으로 당 자금을 조달한다.

노동당 비서국 89호실 소속 금수산 의사당 경리부는 당 경제기관의 기둥으로 주석 예비자금(통치자금)과 주석의 개인자산을 운영·관리하며 4년제 1개 전문대학, 4개의 전문연구소, 60여개의 공장, 광산, 농·목장, 수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가신그룹의 형태를 띠고 있다.

노동당 재정경리부는 당 조직의 활동에 사용하는 예산과 그 집행의 직접적 담당이

다. 이외 노동당 비서국 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 및 복수목적의 기관, 기업소 등이 있는데 이들도 당 경제기관의 한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당 경제기관들의 금융결제는 조선중앙은행이나 무역은행을 통하지 않고 합영은행과 대성은행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직접 이루어진다.

2) 내각경제

내각경제는 북한의 일반 민간경제부문(제1경제위원회)으로서 북한경제의 기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각은 예산의 편성, 집행, 총화의 전과정을 1년 단위로 진행하며 주민들의 모든 물질 경제를 책임진다. 내각은 중앙에 내각 사무국, 국가계획위, 외무성, 무역성, 재정성, 노동성, 교육문화성, 철도성, 농업성, 수산성, 화학공업성, 경공업성, 임업성, 건설건재공업성, 육해운성, 금속기계공업성, 전자공업성, 전기석탄공업성, 지방공업성 등 행정 및 경제실무 부서들을 두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경제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일반생산 활동을 이끈다.

3) 군수경제

북한의 전군의 간부화, 전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의 군사노선과 국방건설, 경제건설을 병진시키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제시하고 실현을 적극 추진해 왔다. 1970년대 들어 당중앙위원회에 군수공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는 부서를 설립했으며, 군수산업을 위해 행정·실무적으로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제2경제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행정·실무적으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며, 정책적으로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지도를 받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 예하에 구방과학원과 포, 저격무기, 비행기, 함선, 미사일, 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부품, 총포탄과 같은 일부 군수품은 간접 군수품 생산라인인 내각 산하 공장, 기업소 일용직장에서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2경제라는 것은 암시장이나 지하공장, 농민시장 등 당국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지하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군수 산업체를 의미하고 있다. 북한은 무기 및 장비를 제외한 피복, 부식물, 장구류 등과 같은 군수물자들은 인민 무역성 총참모부에서 직접 생산·조달하도록 하는 군수품 생산보장 체계도 수립하고 있다.

5개 군(郡)이 인민무력성에 소속되어 전문적으로 군수물자만 생산·조달되고 있으며, 회령담배공장, 105호 공장, 115호 공장, 122호 공장, 113호 공장, 22호 공장 등과 같이 군수품 생산업체는 약 1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의 군수경제는 무기 및 장비의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산업체인 국방위원회 직속 제2경제위원회와 군수물자의 생산보장을 맡고 있는 인민무역성 산하 군수물자 생산라인으로 구성되어 일반경제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Ⅲ. 북한의 경제체제의 제도적 고찰

1. 경제관리의 원리

북한경제체제의 모든 명령체제를 지배하는 기초적 운영원칙은 수뇌조직이 인위적으로 발부하는 '명령의 원리'를 따른다. 지도자나 당이 경제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지침으로 따르기만 하는 되는 것이다.

북한의 전경제체제는 하나의 거대한 관료적 피라미드 계층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상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체제의 과업에 정치 및 경제가 분리될 수 없고 관리와 이행은 철저히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의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통일교육원, 2005: 97-99)

첫째, 당정치사업과 정치사상적 자극 우선의 원칙이다. 이것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국가 및 당의 이념적 근거가 경제적 근거보다 우선함을 의미한다. 계획화 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노력조직, 협동생산조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경제조직사업'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지도 및 관리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활용하는 물질적 유인체계보다 공적가치에 기초를 둔 도덕적 유인체계를 활용하여 인민을 동기부여화 시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각종 속도전과 같은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이 이러한 원칙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배합원칙이다. 이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활동과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배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당위원회는 각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 조직의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 및 결정하고 그 집행과정을 지도·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당조직사업과 사상교양사업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경제관리운영과 생산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당위원회는 집체적 지도의 역할을 한다.

셋째,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원칙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중앙집중적 계획과정을, 계획의 세부화는 경제단위 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원이다. 북한당국은 계획의일원화 및 세부화만이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이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넷째, 독립채산제의 실시이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위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공장 및 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받아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공장과 기업소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물자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사회주의 독

립채산제는 원리상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하부단위조직에 분산적 의사결정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물적 균형계획이 실시되는 명령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이 국가계획의 명령에 따라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기업의 자금수지를 관찰하여 기업이 계획의 명령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위공장 및 기업소의 회계감시를 통해 이들의 실적을 관찰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소련은 이와 같은 것은 '루불에 의한 통제'라 불렀고, 북한도 이를 '원에 의한 통제'라 한다.

2. 경제유인체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생산적 자산의 소유가 허용되어 이들이 각자 보상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 경제적 활동의욕의 원천이 되는 동기가 되고 원천이 된다.

북한과 같이 생산적 자산이 국가에 집중된 사회에서는 정부가 보상적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인민들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된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물질적 자극과 같은 이념에 반하는 이기적 유인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다른 동기유발요인을 찾는다.

명령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규범적 권력을 창출하여 인민의 무성의한 참여를 보완하고자 한다. 즉 캠페인, 의식교육, 메달포상 등을 통하여 도덕적 사회규범을 세우고 인민이 자발적으로 '공통의 선' 혹은 '숭고한 목적'을 위해 유발되기를 바라며 유도한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중장기 경제계획 자체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서 중앙통제의 기능이 저하되고 사적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내외의 경제현실에 맞는 운영체계를 적용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이제는 구시대적인 사회주의 경쟁운동[2)]으로 인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3. 경제관리체계

1) 산업관리체계(농업관리체계, 공업관리체계, 상업유통관리체계)

---

2) 대표적인 것으로 1950년대 전쟁기간 중의 '증산돌격운동', '3·1절 증산운동', '5·1절 증산운동'. '상시증산돌격대', 전후의 '복구돌격대운동', '민청순회우승기쟁취운동', '천리마 운동(1956년)', '천리마작업반운동(1959)',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1975)', 80년대의 '속도창조운동',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 90년대의 '정춘실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농업문제는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집단체제하에서 관리·운영되는 북한 농업의 집단화는 1953년에 시작하여 1968년에 완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농업관리는 주체농법을 원칙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주체농법은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화학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는 농법을 의미하며, 즉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집약하는 집약농업을 말한다.

농업 지도관리체계는 김일성에 의하여 제시된 청산리방식[3]에 의해 마련되었고, 청산리방법은 북한 모든 경제조직의 기본원칙이며 관리자의 행동지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산리 방법에 의하여 북한은 종점의 리단위 농업협동조합 조직을 군단위 체제로 개편하여 새로운 관리방식을 취하였다.

즉 군인민위원회는 리를 생산단위로 하는 계획의 수립과 관리를 강화하고,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농업이 관리·운영되고 있다.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생산조직의 기본 형태는 작업반이 중심이 되고 작업반은 일정한 경지와 인력 및 농기구를 배당받아 부과된 생산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다. 작업반은 다시 분조단위로 각종의 작업이 행하여진다.

작업반은 협동농장의 규모와 기타 생산적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능별로 나뉘어지고, 협동농장에서의 분배는 일반적으로 연도별 결산을 통하여 행해지고, 그것은 노동의 양에 비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써 분배된다. 분배방법은 농민이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산정된 '노력점수'에 기초하여 분배된다.

하지만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체제의 한계점 때문에 매년 심각한 식량난은 지속되고 있다.[4]

둘째, 북한은 공업관리체계를 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조직된 관리기구들과 그 기능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업관리체계에는 공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구뿐만 아니라 관리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공업관리체계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관리범위에 따라서

---

3) 청산리정신, 청산리 방식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한데서 비롯됐다. 청산리 방법의 주요내용은 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② 늘 현지에 내려가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며, ③ 모든 활동에서의 정치활동을 선행함으로써 노동자 각자의 열의와 창의를 발휘하며, ④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경부해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내며, ⑤ 사업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⑥모든 사업은 계획화하여 힘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4) 북한이 1년동안 필요로 하는 식량(쌀, 옥수수, 보리, 감자 등)은 약 650만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사를 면하는 수준이라해도 최소한 550만톤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0년만에 최대 풍년으로 알려진 지난해에도 450만톤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은 부족분을 한국에서 제공하는 40-50만톤과 중국의 20-30만톤, 국제사회의 20-30만톤으로 충당해 550만톤이라는 최소 영양수준을 맞춰왔다.(한겨레, 2006. 10. 11)

국가차원에서 공업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국가적 관리체계와 공장·기업소 차원에서 생산을 조직·지도하는 공장 및 기업소 관리체계로 나뉘어 진다.

1971년 이후 이전에 실시되던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며 생산조직을 개편한 '연합기업소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1985년 7월 이후 부터는 전기업이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합기업소는 중앙계획기관의 지도하에 직접 계획을 세우고 생산하는 계획·생산·집행의 단위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모기업이 산하에 원자재, 부품 등 하청업체를 거느리는 수직적 기업통합조직형이다.

이러한 조직은 북한경제와 같은 피라미드 구조의 생산체제에서는 불가피한 조직으로 단지 계획 및 관리운영단위를 기업 수준으로 이양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은 연합기업소를 다시 해체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것 같다. 2000년 1월에는 연합기업소 종합공장, 기업소, 연합총국 등 44개의 공장기업소를 해체하였다. 또한 기업집단의 이름에서 연합, 종합, 총국 등은 삭제하고 과거의 공장, 관리국 등의 이름으로 환원하였다.

이는 연합기업소 조직이 당초 기대했던 바의 성과를 얻지 못했거나 예기치 않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북한은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어느 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으로서 연합기업소 갖은 수직적 기업연합은 흔히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생산조직과의 연계관계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자원공급이 부족하고 전국적인 물자배분체계의 불균형과 왜곡을 초래할 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력난으로 인한 공업부분의 회복은 사실상 자력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석탄중심의 화력발전,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으로 인한 이들 국가로부터의 지원감소와 군수산업, 중공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5)]

셋째, 북한의 상업유통은 국가통제하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상업은 상품공급을 위한 유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의 상업유통체계는 다음과 같다.

- 소유형태 면에서는 국영상점망이 지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협동단체의 상업망과 농민시장이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상업유통의 시설 면에서는 면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보면 백화점, 종합상점, 직매점, 리상점, 협동농장상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곡물을 제외한 잡화, 의류, 식료품 등 생활물자를 판매하고 있다.

-운영 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구매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상품의 공급부족과 관련이 있다. 외화상점의 경우 외화소지자에 대하여 상품을 매매토록 하고 있

5) 2003년 현재 북한의 실제 발전 가동율은 설비용량의 28.8% 수준으로 에너지 공급원의 감소와 설비노후화, 송배전 시스템의 불안 등이 주요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www.hri.co.kr, 2006.11.12)

으며 일반주민들의 상품거래는 통제하고 있다.

2) 기업관리체계

오늘날 북한의 공장 및 기업소는 명목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와 지방공장을 모두 포함하고 농업부문과 비생산적인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이를 확대 실시하였다. 이러한 독립채산제는 대상기관과 실시 정도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독립채산제에서는 각 국영기업이 은행신용의 이용과 독자적인 대차대조표를 보유하며, 물자구입과 판매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한다.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양적지표가 아닌 화폐지표를 활용하며 이익금에 있어서는 기업소유자로서 국가가 '국가기업 이익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나머지 이익을 기업소의 운영상태 개선과 종업원의 물질생활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기업의 자율권과 물질적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활동의 동기를 높이자는 의도인 것이다.

둘째, 반독립채산제는 비생산부문의 기관 및 기업소들 가운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들에 적용하는 부분적인 독립채산제 형태이다.

셋째, 이중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나 총국, 관리국 등의 산하에 있는 단이 기업소들이 단이 기업 자체로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상위 생산조직에서도 다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독립채산제 실시에 대한 특별한 의의를 두고 있다.

즉 북한당국은 독립채산제 실시에 있어서 노동당 정책과 국가계획의 무조건적 실행, 기업운영에 있어서 생산대중의 참여와 정치사업 등의 선행을 전제하고 여기에 중앙의 계획관리, 기업소 운용에서의 융통성, 상품과 화폐관계에 있어서의 적절한 배합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치 및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이 옳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 운용은 기존의 기업감시체제가 불안했던 점을 보완하여 중앙계획체제를 더욱 완벽하게 하자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다.[6)]

Ⅳ. 북한 경제의 자본주의적 접근에 대한 이해

1. 개방형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6) 북한의 독립채산제를 보면 의사결정권의 분산취지를 가진 제도로 이해할 수 없다. 독립채산제를 통해 오히려 중앙당국의 기업통제수단은 더욱 구체화·명확화되었다. 해당 기업소의 노임, 자금, 상금, 기업소 기금의 적립 규모 등 모든 경제관리는 정확히 규정화되고 고정자산의 관리 및 이용을 제도화하여, 재정의무 수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엄격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이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정책노선으로 삼아 온 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다(통일교육원, 2005). 북한에 의하면 자립적 민족경제란 "생산의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분만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 나가는 체계"를 의미한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발전조선에 따라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한의 필요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수출은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만 활용했다.

즉 북한이 표방했던 자립적 경제발전노선은 1960년대에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적 발전전략을 채택했던 제3세계 국가들보다도 대외경제관계를 더 최소화한 발전전략으로서, 북한경제를 국제 분업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경제형으로 만들고, 국내산업구조도 국제시장에서의 비교우위의 법칙이 무시된 산업구조로 정착시켰다. 이는 국내원자재에만 의존한 산업기술을 구축하여 세계기술발전 추세와 큰 격차가 있는 산업경제를 고착화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제체질이 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부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일부 완화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추지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서방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의 차관을 매개로 한 선진기술도입을 시도하고, 1980년대에는 합영법의 제정을 통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대의 대외개방정책은 전술적 변화로서 대외경제 부문은 여전히 보완적으로만 인식되는 수준이었다.

1990년대 들어 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고 나 후부터 시도되었다. 1991년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외국자본과의 합작 및 직접투자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체제경쟁대산인 한국자본의 북한 투자를 허용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외형상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 완결적 자력갱생'으로부터 국제적인 분업질서로의 편입을 전제로 한 '개방형적 자력갱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7·1조치'가 단행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분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의 전략적 변화모습도 나타내고 있다.

즉 북한은 '7·1조치' 발표한 직후인 2002년 9월 신의주 행정특구, 10월 개성공업지구, 11월 금강산관광특구 등으로 대외개방지역을 확대해 나갔다. 신의주 행정특구는 중국의 반대로 2004년 8월 일시 중단되었지만, 개성·금강산 특구는 남한 단독자본의 투자에 의한 조차지적 개발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트남, 중국보다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 세제 등 외국인투자관련 법제를 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등 수도권 지역에까지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으로 기존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노동신문2001.2.8)고 하면서 '개방형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군사·경제 병진노선

1960년대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제창하며 병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군사·경제 병진노선은 196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군사·경제 병진노선은 북한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즉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간 구별이 어렵게 되었으며, 군수산업은 민수산업을 관리하는 제1경제위원회와는 별도로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리됨으로써 북한 경제구조를 제1경제(민간경제)와 제2경제(군수경제)로 이원화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군수산업으로 투자재원이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장은 제약되고 소비생활부문의 발전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7·1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국방공업에의 선차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이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경제건설노선으로 북한은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7]을 거친 후 대내적으로는 북한경제를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제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전화 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체제의 안위도 보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혁명과 건설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기존의 경제건설노선은 수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군사를 선행의 원칙으로 하는 선군을 전제로 하고 국방공업과 중공업·경공업·농업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경공업·농업은 인민의 물질적 수요를 생산·보장해 주는데 전자가 충족되는 조건하에서만 후자의 수요도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7) 90년대 중·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이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시기를 말한다. 38-39년 초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빨치산이 만주에서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100일간 행군한데서 유래했다.(중앙일보, 2006.10.16)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공업 우선 건설노선은 중공업 우선 건설전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는 국방공업과 민수생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방공업에 선차적 힘을 넣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의 경제와 국방의 병진건설노선에 의해 국방공업·중공업이 산업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고, 경제회복을 위해 기존의 경제적 토대들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공업의 발전은 첨단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다른 경제부문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공업 우선 발전논리는 계획경제의 분권화, 화폐화, 시장화를 의도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킨다고 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앞서 나가는 국방공업에 적극 따라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한다.

즉 계획지표의 선정에서 군수생산지표와 민수생산지표를 구분하고 군수생산지표를 우선시하는 계획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수생산부문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방공업부문은 계속 계획경제 시스템에 의해 운용되면서 지방공업, 경공업, 농업, 상업 등 민수생산부문에서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기존의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계승하는 경제정책이면서 7·1조치 이후의 북한식 개혁·개방도 추진하는 이중 전략적 경제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4. 실리주의 사회주의 노선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회복을 위해 고심한 끝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인 '수령절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제경제질서에 적극 편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실리사회주의 노선'이다.

북한에 의하면 실리사회주의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활동의 성과에 있어서 최대의 실리를 취하는 것인데, 즉 기업소·협동농장 등 각 경제단위들은 집단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개별단위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현상적으로 보면 기존의 집단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계획경제적 논리의 재표방인 것 같지만,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으로서 경제개혁·개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살펴보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목표로 더 이상 최대생산량이 아닌 최대수익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조절 도구로써 시장의 기능을 도입·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기업소 등 경제단위들은 수익성 위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관

리체계도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경제활동 공간으로 시장경제공간도 허용되어야 한다.

북한은 21세기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응하여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간의 조화로운 병존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리사회주의 노선은 1980년대 초반 중국의 경우 ‘초급사회주의단계론’이라는 이론에 의하여 기존 경제정책의 기조를 대체하고 정치이념도 수정한 반면 북한은 기존의 경제정책기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정치이념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Ⅴ. 맺음말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도 상업, 농업, 기업 등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을 위해 후속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기업개혁을 위해 계획경제를 탈피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지배인 중심의 책임경영을 시행했다.

그러나 경공업 부문 경제성장률은 2003년 2%에서 2004년 -0.2%로 하락했다. 북한이 발표한 2005년도 상반기 제조업 부문 경영실적 역시 중화학공업, 경공업 부문에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협동농장의 기초 생산기지인 분조 규모를 축소하고 작목 선택권을 허용했다. 또 농지를 세 종류로 나눠 토지사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분배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7·1조치가 시행된 2002년 395만톤이던 곡물생산량이 2003년부터는 400만톤을 넘었고, 2005년에는 2004년도보다 늘어나 454만톤으로 추정했다. 유통과 상업분야는 개혁이 두드러지고 성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03년 3월 단행된 종합시장 개설 등의 개혁조치로 유통구조가 국영공급에서 시장유통체제로 부분 전환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러시아와 합작한 대형 쇼핑센터와 백화점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 전문도매상과 24시간 편의점,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 고급 전문점 등이 등장하는 등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세계일보, 2006. 7. 4)

또한 인민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바뀐 것으로 보여 진다. 사회주의 시스템을 지탱해주는 배급체제가 붕괴되고, 즉 과거 거주지 중심에서 배급받던 것이 기업별로 종업원들에게 자체 배급하도록 하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기업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기업체들은 이윤이 남는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고, 첨단설비를 도입하는 등 자본주의로의 체질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이 북한에서 연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양의 일부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10% 할인 쿠폰을 주는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북한 최고의 예술극장인 만수대예술극장은 일반 주민을 위해 결혼 예식장을 마련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수입

증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7·1조치 이후 북한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매년 300-400%를 기록하고 있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격차는 수십 배에 달한다. 쌀의 경우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의 차이는 최고 20배에 달한다. 이 대문에 북한당국은 2005년 10월 쌀의 시장거래를 금지하고 배급제를 부활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식량부족으로 인해 배급제는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빈부격차 역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은 DVD 플레이어로 영화를 보고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율문제가 북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북한의 공식환율은 1$당 143원(06년 10월 기준)이지만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달러당 3,000원이 넘는다. 따라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이념과 지도자의 성향을 같이 파악해야 하는 사회주의의 명령식 경제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영림. (2002). 북한경제현황과 그 전망. www.pyung.co.kr/junmang.htm

사회과학원. (1970).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통계청. (2004).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통일교육원. (2005).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통일교육원. (2005). 「북한이해」.

www.hri.co.kr